

중국 우한서 '광주형 자율주행 미래도시' 해법 찾다

시, 19년 우호협력 지속...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교류 확장 지능형커넥티드카 단지서 광주 자율주행 실증 해법 모색 샤오미 스마트공장·공중열차·로봇센터 등 미래도시 점검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대표단이 2007년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이후 19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해 자율주행과 로봇,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 대표단은 10~11일(현지시간) 이틀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실증지구인 우한시 국가 지능형 커넥티드카(ICV·Intelligent Connected Vehicle) 시험 실증단지를 비롯해 샤오미 스마트공장, 광곡(光谷) 공중열차, 휴머노이드 로봇센터 등 미래산업 현장을 잇따라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광주시가 오는 2028년까지 국비 61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산업 정책의 추진 동력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11일 우한 국가 지능형 커넥티드카(ICV) 시험실증단지를 찾아 자율주행 기술과 운영 체계를 살펴봤다.

이 실증단지는 2019년 중국 중부권 최초의 자율주행 실증단지로 지정된 이후 2024년 세계 최대 규모의 무인 자율주행 구역으로 확대됐다. 현재 자율주행 개방도로는 3380km에 달해 중국 전체 개방도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인 로보

택시 등 자율주행차 500여대가 24시간 운행되고 있다. 차량 1대당 하루 평균 주행 거리는 약 300km에 이른다.

광주시 대표단은 현장에서 돌발상황 발생 시 밀리초(ms) 단위 원격제어 시스템과 5G 기반 차량·사물 통신(V2X), 기업 상주 공간과 전용 통신망 등 우한의 기업 밀착형 자율주행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2026년 하반기부터 현대자동차, 오토노머스아이투지, 라이드플러스 등 3개 기업이 참여하는 광주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사업을 소개하고 양 도시 간 협력 가능성도 논의했다.

광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 전역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검증 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정 구간이나 노선 중심의 기존 실증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자율주행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제 도로 환경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단은 앞서 10일 우한 동호첨단기술개발구(광곡)의 핵심 산업시설인 샤오미 스마트공장과 광곡 공중열차, 우한 휴머노이드 로봇센터를 방문해 미래산업 현장을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대표단이 지난 10일 연면적 7000㎡ 규모의 우한 휴머노이드 로봇센터를 찾아 로봇 산업 육성 현황을 살펴봤다.

둘러봤다.

샤오미 스마트공장은 물류 자동화율 94% 이상, 6.5초당 에어컨 1대 생산, 자율 이동로봇(AMR) 160여대 운영 등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집약된 첨단 제조시설이다. 대표단은 150여대의 카메라와 센서가 실시간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AI 비전검사 시스템과 생산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AI 제조 플랫폼에 주목했다. 이는 광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가전·부동산의 인공지능 전환(AI)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어 중국 최초로 상업 운행에 들어간 광곡 공중열차를 직접 체험했다. 무인 모노레일 방식의 이 열차는 차량이 궤도 하부에 매달려 운행되며, AI와 5G 통신망을 활용해 출발부터 정밀 정차까지 전 과정을 자동 제어하는 친환경 지능형 교통수단이다.

대표단은 또 연면적 7000㎡ 규모의 우한 휴머노이드 로봇센터를 찾아 로봇 산업 육성 현황을 살펴봤다. 이곳에서는 물건 집기와 물류 운반, 돌봄 보조 등 23개 응용 분야를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구현한 공간에서 로봇들이 반복 학습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100만건 이상의 동작·센서 데이터가 축적돼 로봇 성능 고도화에 활용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우한의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와 사람 없이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 매일 학습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보며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됐음을 실감했다"며 "미래산업 육성은 기술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증과 상용화, 도시 적용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결단과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통합특별시 출범 대비 공공기관 혁신전략 모색

광주연구원·정책연구회, 통합정책포럼 개최 기능 중심 통합·거버넌스 재설계 필요성 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기능 강화와 혁신 전략, 통합 절차 및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이 열렸다.

광주연구원과 광주정책연구회는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 통합정책포럼: 공공기관 기능 강화 및 혁신전략'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포럼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통합·재구조화 방향과 지방 공공기관 거버넌스 설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비롯해 광주지역 공공기관장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단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전략팀장은 "공공기관 통합 절차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과거 공공기관 통합 사례를 분석했다. 김 팀장은 해산·정산 이후 흡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체계 문제를 설명하며 "통합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광욱 광주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기능 강화 및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통합은 단순히 몇 개 기관을 합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어떻게 연결해 지역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능 중심의 통합과 생태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혁신은 단절된 가치와 공간을 연결하는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은 어영현 전 한국지방공기업협회 회장(선문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광주연구원과 광주정책연구회는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 통합정책포럼: 공공기관 기능 강화 및 혁신전략'을 개최했다.

김상윤 공공기관평가연구소 대표는 전략신설형 통합의 경우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자 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 회장은 "공공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통합 역시 조직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 주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요상 대구대학교 교수는 "통합 자재만으로 새로운 기능이 자동으로 창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성과 창출과 관리·감독을 위해 메타 거버넌스 조직인 '공공기관 연구회' 출범을 제안했다.

심준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디렉터는 "통합을 통한 예산 효율화 기대는 크지만 실제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통합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병행돼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증시 훈풍에 '빚투' 몰렸다...가계대출 9조 급증 주식형펀드 58.8조원↑·기타펀드 21조원↑ '역대 최대'

지난달 자산운용사의 수신이 증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 (빚내서 투자)로 인해 은행권 가계대출도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7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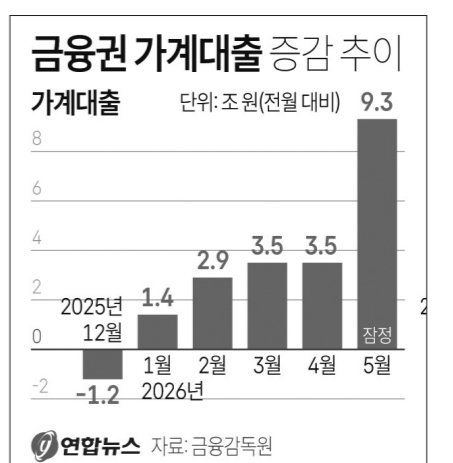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6년 5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81조8000억원으로, 4월 말보다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4년 8월(+9조2000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12월(-2조원), 올해 1월(-1조1000억원), 2월(-4000억원) 등으로 월간 감소 폭이 줄었고, 3월(+5000억원), 4월(+2조1000억원)에 이어 5월까지 증가 폭이 늘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해 전년(+3조5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지난 2024년 8월(+9조7000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로,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4월 99조6000억원 늘어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데 이어 5월에도 86조4000억원 증가했다.

주식형펀드가 58조8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였던 전년(+55조7000억원) 증가 폭을 넘어섰다. 기타펀드도 21조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경신했다. 임재용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역대급 과징금

개인정보위, 유출사건 제재안 의결...6247억 부과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으로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수집한 쿠팡이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에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과태료 168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과 공표, 공표명령, 고발 및 개선권고 등도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 1347억9100

만원보다 4898억9000만원 더 많은 수준이며 단일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중에서는 역대 최고액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 매출의 3%까지 부과 가능하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약 45조5000억원)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은 약 1.37% 수준이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인종 서명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3750여만명의 개인 정보

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쿠팡에 근무 당시 대체 인증을 개발했던 해커는 쿠팡의 서비스 페이지에 접근해 총 3322만2472명 회원의 이름, 이메일 등 개인정보와 비밀번호 433만8368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특히 해킹 당한 배송지 정보에는 회원 본인 외에도 가족·친구 등 제3자의 이름과 비밀번호도 포함됐고 공동연관 비밀번호도 유출됐다.

유출통지·파기 의무 및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위반과 조사 방해 등도 추가 확인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 권리 침해와 관련해 쿠팡에서 타사 웹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

한 상태로 DB에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부정광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 명령했다. 쿠팡 계열사인 쿠팡플랫폼서비스(CFS)에는 과징금 2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정보주체 권리 침해 관련해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71명)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의 처분 의결서 송달 절차는 통상 1~3개월가량 소요되며, 쿠팡은 의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유 여부 등 공식 입장을 밝히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윤용성 기자 yoi404@

국내 금값, 장중 1g당 20만원 아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11일 국내 금시세가 장중 한때 1g당 20만원 아래로 내려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의 이날 국내 금 시세(99.99_1kg)는 전장보다 2.61% 내린 1g당 20만3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1g당 19만8060원으로 출발한 금 시세는 개장 직후 19만6780원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인 이후 중일 등락을 거듭했다.

KRX금시장의 국내 금 시세가 20만원 이하로 내려간 건 작년 12월 11일 이후 6개월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금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간밤 시카고파생상품거래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콤포스(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3.6% 급락한 온스당 4133달러로 마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해 더 강력한 추가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귀금속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금가격을 지탱하던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가 종식되고 긴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속도가 둔화할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연합뉴스